

‘힘의 중심’의 북중관계와 한반도 통일

조철호 (국민대학교)

I. 서론

이 연구는 왜 한반도 통일이 안되고 있는가를 한반도 통일의 국제적 조건 중에서 북중관계를 클라우제비치의 핵심 개념인 ‘힘의 중심(center of gravity)’을 가지고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과거의 북중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대한 역사적 고찰 속에서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북중관계의 본질과 함의를 규명할 것이다. 또한 이를 기초로 현재의 북중관계는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를 분석할 것이다. 특히 한반도 통일 관련하여 북중관계의 한계와 문제점을 파악할 것이다. 마지막에서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미래의 북중관계는 어떻게 변모하여야 하는가를 검토할 것이다.

최근에 들어서 중국은 국내총생산 12조 2,377억, 47만 9,375달러 세계 2위 국민총소득 12조 2,065억, 4,554만 628.5달러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¹⁾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국이며 동시에 2018년 3월 기준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규모는 \$1187.7b (약 1340조원)에 달하는것으로 최대의 채권국이다. 중국의 군사비 지출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이며, 석유 소비 역시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²⁾ 중국의 공식 국방비는 2000년 이후 10여 년 동안 4배로 증가하였다. 국방비를 축소 발표하는 중국 정부의 경향을 감안하면 실제 예산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중국의 군사대국화는 해군력 증강, 공군력 현대화, 핵전력 현대화 등 첨단전쟁 수행능력을 증가시키고 있다. 중국의 군사력은 높은 수준의 군현대화를 통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핵전력, 항공력, 해군력 면에서 해외 투사력(projection power)의 보유를 시도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성장과 군사대국화에 의해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되었다는 측면에서 한반도 통일과 북중관계의 변화에 대한 역사적 고찰은 의미가 있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서도 한반도 통일 관련 중국의 이해관계, 영향력, 역할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실제로 국민의 인식 속에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할 나라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통일연구원의 2010년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2009년에 비하여 통일을 위한 1순위 협력국가로 미국(73.6% -> 69.7%) 다음으로 중국(20.4% -> 24.5%)이 차지하였고, 2순위 협력국가에서는 중국(35.4% -> 41.7%)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³⁾ 이러한 점에서 한반도 통일 관련 중국의 이해관계와 역할을 북중 관계의 역사적 변화를 중심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II. 힘의 중심으로서의 중국과 북한체제 유지

과거의 북중관계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대한 역사적 고찰은 한반도 분단과 통일에 대한

1) 2017 한국은행, The World Bank, 대만통계청 기준.

2) 김동수, “미중관계의 변화와 신동북아 형성,” 『CHINA 연구』, 제18집 (2015), pp. 64-65.

3) 박종철 외, 『통일환경평가: 국내요인, 남북한 상대적 역량요인, 북한요인, 국제요인의 종합평가』, (서울: 늘품플러스, 2011), p. 608.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입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요하다. 특히 한국전쟁에서 나타나는 중국의 역할과 영향력은 한반도 분단과 통일에 대하여 중국이 어떠한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었고,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 분단체제 속에서 북중관계의 본질적 성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북중관계에 대한 기준연구는 1961년에 체결된 북·중우호·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을 중심으로 논의하여 왔다. 북한과 중국이 동맹조약을 체결한 이후 50년 동안 그 과거의 혈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속론 보다 보편적 관계로 전환하고 있다는 변화론을 주장하는 분석이 더 많다.⁴⁾ 최명해는 북중동맹의 체결 배경과 과정을 북한의 내부적 요인, 중소분쟁의 체계적 요인, 김일성의 개인적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⁵⁾ 고수석은 포기-연루의 딜레마 모델을 닉슨의 방중, 한중수교, 1975년 북한의 무력도발, 2차 북핵위기에 적용하고, 후견-피후견관계 모델을 중국의 경제지원과 개혁·개방 설득과 중국의 군사지원과 대북영향력에 적용한 후, 포기-연루 딜레마 모델이 설득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⁶⁾ 이상숙은 중국이 강대국으로서의 인식을 확립하기 시작한 1970년대 데탕트시기부터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는 비대칭관계에서 나타나는 ‘자주-북중’의 갈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⁷⁾

그러나 한반도 분단과 통일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입장이 표출된 북중관계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국전쟁 과정에서 형성된 북중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전쟁이 아니었다라면 세계정치의 역사는 대단히 달라졌을 것”⁸⁾이라고 저비스(Robert Jervis) 교수가 말할 정도로,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전면적 남침으로 시작되어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의 조인으로 인하여 잠정적으로 완결된 한국전쟁은 국내적 차원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왜냐하면 한국전쟁은 해방 이후 시도된 3번의 통일시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첫 번째 통일시도인 좌우합작, 남북협상 등을 통한 통일정부 수립시도가 이데올로기 갈등과 헤게모니 투쟁으로 실패한 결과 한국전쟁을 잉태하게 만들었다. 두 번째 통일시도인 김일성식 무력적화통일은 한국전쟁을 시작되었다. 세 번째 통일시도인 이승만식 북진통일론은 중국인민국의 개입을 초래하여 약 3년간의 장기전을 치른 후 한국전쟁이 종결되었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두 번째 통일시도인 김일성식 무력적화통일은 이에 대한 한미관계의 본질적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세 번째 통일시도인 이승만식 북진통일론은 북중 관계의 본질적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는 한국전쟁과 북중 관계를 중심으로 주로 분석하고, 이와 대비하여 한국전쟁과 한미관계도 보조적으로 언급할 것이다.

한국전쟁은 한반도 분단과 통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입장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더 나아가 이에 따른 역사적 교훈은 냉전 기간 동안 북중관계의 본질적 성격을 형성시켜 왔으며 남북한 분단체제가 계속되는 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정치는 다른 수단들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다”라고 주장한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의 전쟁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쟁의 기본 개념과 전쟁이론의 고전적 원칙으로 국민적 의지 및 지원, 이론의 전쟁과 현실의 전쟁과의 마찰, 전쟁 목적과 힘의 중심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4) 고수석, “북한-중국 동맹 50년: 평가와 전망,” 코리아정책연구원(2011), p. 3.

5) 최명해, “북·중 동맹조약 체결에 대한 소고,”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제4호, (1998), pp. 315-338.

6) 고수석, 앞의 글, pp. 3-16.

7) 이상숙, “데탕트 시기 북중 관계의 비대칭갈등과 그 영향,”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제3호, (2008), pp. 439-472.

8) Rober Jervis, "The Impact of the Korean War on the Cold War",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24 No 4, December (1990), p. 563.

중에서 ‘힘의 중심(the center of gravity)’⁹⁾을 중심으로 한국전쟁에 대하여 역사적 비판연구를 통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역사를 모르는 자는 동일한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역사적 교훈의 유용성을 강조하는 조지 산타나(George Santayana)의 입장과 역사연구는 인간이 어리석은 오류를 피할 수 있게 하는 분명한 방법을 제시하여 주지 않는다는 역사적 교훈의 무용성을 강조하는 가디스 스미스(Gaddis Smith)의 입장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운명이라는 여자 속옷 사이로 숨어서는 안 된다는 알렉산더 솔제니친(Alexander Solzhenitsyn)의 말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즉 당신이 행동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운명은 결과를 미리 결정해 놓고 있다는 스미스 입장을 거부하고 역사적 사실로부터 역사적 교훈을 찾으려는 산타나 입장에서 서야 할 것이다.¹⁰⁾ 이런 면에서 클라우제비츠가 제시한 비판적 분석(critical analysis)을 통하여 한국전쟁에 있어서 북한의 군사전략에 대한 철저한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결과의 측면에서 미리 사물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물의 본질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결과라는 기준을 통해 그 사물에 대한 적절한 판단 및 평가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¹¹⁾

첫째, 한국전쟁은 중국과 대결적인 성격을 갖는 한반도 통일에 반대한다는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군과 유엔군이 인천상륙작전 이후 압록강에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식 북진통일을 왜 달성하지 못했는가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이승만식 북진통일에 의한 한반도 통일은 친미·반중노선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국 인민군의 개입을 결정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중국은 친미·반중을 추구할 한반도 통일은 중국의 국가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전략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우호적인 북중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갖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북중관계의 본질적 성격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한미관계의 본질적 성격도 동일하게 적용가능하다. 북한군이 서울 수도점령 이후 낙동강에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식 적화통일을 왜 달성하지 못했는가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김일성식 무력적화통일에 의한 한반도 통일은 친중·반미노선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군 및 유엔군의 개입을 결정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미국도 친중·반미를 추구할 한반도 통일은 미국의 국가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전략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우호적인 한미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갖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한국전쟁은 북한체제의 유지가 중국의 국가이익에 중요하다는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한국전쟁에서 중국인민군이 개입하여 북한을 패배의 위기에서 구제하여 중국은 북한존립을 위한 힘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국군과 유엔군은 힘의 중심을 북한영토의 장악으로 파악하여 압록강까지 북진하였으나, 본질적으로 힘의 중심은 북한영토가 아닌 북중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이러한 오류는 북한군이 이미 범하고 있었다. 김일성은 힘의 중심을 수도 점령 후 남한영토의 장악으로 파악하여

9) Carl von Clausewitz *On War*, edited and translated by Michael Howard and Peter Paret with Introductory Essays by Peter Paret, Michael Howard, and Bernard Brodie and a Commentary by Bernard Brodie,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I:1, p. 87. 『Afterwards, "Clausewitz, *On War*", The roman numerals represent the book, the arabic numerals the chapter.』

10) Harry G. Summers, JR., *On strategy: The Vietnam War in Context*, (Strategic Studies Institute US Army War College, Carlisle Barracks, Pennsylvania 17013, April, 1981), pp. 53-54.

11) Carl von Clausewitz, 앞의 책, pp. 156-165.

낙동강까지 남진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힘의 중심은 남한영토가 아닌 한미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이러한 면에서 북중관계가 북한체제유지를 위한 힘의 중심으로서 북한체제의 존립을 위한 지원이 계속되어 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미관계가 남한체제를 위한 힘의 중심으로서 남한체제의 안정을 위한 협력을 지속되어 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전쟁은 남북한체제 속에서 힘의 중심인 미중의 소모적인 군사적 대결은 차선으로서 남북한 분단체제의 수용이 가능한 차선이라는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인민군의 개입 이후 친중적인 북한식 무력통일에 의한 한반도 통일을 최선의 대안으로 추구하였으나, 약 3년 동안의 장기전 속에서 수많은 인명손상과 재산손실을 겪은 후에 중국은 정전협정을 합의하였다. 이는 다른 힘의 중심인 미국이 존재하는 한 물리적인 군사력에 의한 현상타파라는 최선의 대안은 불가능한 이상이며 평화적 해결방식에 의한 남북한 분단체제 현상유지라는 차선의 대안은 가능한 현실이라는 역사적 교훈을 습득하게 되었다.

Ⅲ. 중국의 지역적 특수이익과 국제적 보편가치와의 충돌

탈냉전을 맞이한 현재의 북중 관계는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에 대한 현재의 북중관계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북중 관계의 핵심적 이슈를 차지하고 있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한 핵문제와 천안함 폭침 사태와 연평도 포격 사태와 같은 군사주의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중국의 지역적 특수이익과 국제적 보편가치와의 충돌을 잘 보여주었다. 이 속에서 나타나는 북중 관계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입장을 파악하고 과거의 북중 관계와 다른 변화가 발생하였는가의 여부를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북한 핵문제에 대하여 중국은 원칙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고, 표면적으로 북한의 1차 및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의 제재조치에 동의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체제유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북한의 제재조치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상반된 양상을 보여 왔다. 오히려 북한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 내지 북한에 대한 중국의 확대를 위한 북중 경제관계의 활성화에 시도하였다.

1차 북핵위기의 경우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대북압박 및 제재에 분명한 반대입장을 천명하면서 방관자로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미중관계의 개선을 위한 레버리지로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2차 북핵위기의 경우 북미간의 중재자로서 적극적 자세를 보였으나, 미중관계의 개선에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¹²⁾ 최명해는 이러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기조를 '현상 유지 플러스(status quo plus)로 표현하고 있다.¹³⁾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최우선시하면서 남북한 모두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반도 현상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할 때 중국의 전략적 이해(경제발전을 위해 안정적 안보환경 마련 및 상대적 영향력 유지)에 가장 부합할 것이란 점이다. 중국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미국의 선제공격을 차단하고 북한 김정일 정권을 연장시켜 책임대국과 북한체제의 유지를 위한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하여 왔다.¹⁴⁾

2006년 10월 3일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대북제재 결의안 1718호의 채택을 동의

12) 최명해, “북한의 2차 핵실험과 북·중관계,” 『국방정책연구』 제25권 제3호, 가을(2009), pp.125-128.

13) 최명해, 앞의 책, p. 116.

14) 한석희, “6자회담과 중국의 딜레마,” 『국제정치논총』 제45집 1호(2005), pp. 183-189.

하였지만,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경제제재를 배제하려는 입장을 보였다.¹⁵⁾ 2009년 5월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북한의 무기수출 전면금지와 은행거래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는 강화된 대북제재 결의안 1874호의 채택을 동의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북한체제유지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는 협력하지 않았다. 이러한 측면과 연결되어 북한의 1차 핵실험을 계기로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차 북핵 위기 시 중국은 사실상 방관자로 인식되었다. 당시 중국은 북미간 중재를 통해 외교적 부담을 감수하기 보다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및 제재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천명하면서 주변 정세 안정에 유리한 조치를 취해 나가는 소극적 행보를 보였다.¹⁶⁾ 또한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에는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의 한계에 대한 논의가 강해졌다. 중국이 대북 원유와 식량 원조를 바탕으로 일정한 수준에서 영향력을 인정하지만 영향력 행사범위에는 한계가 있다는 연구가 많이 나왔다.¹⁷⁾

1990년대 초반부터 북한의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은 2005년부터 북한의 대외무역(남북교역 제외)에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2008년에는 73%까지 확대되어 왔다.¹⁸⁾ 북중경제관계는 2005년에는 북중간 '투자 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경제협력동동위원회 설치에 합의하면서, 과거의 단순 교류 및 중국의 대북지원과 같은 차원을 넘어서는 양국간 경제관계 확대를 통한 제도적 협력관계를 지향하고 있다.¹⁹⁾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에도 2009년 7월 1일 "요령연행경제개발전규획"을 국가전략으로 정식비준하였고, 2009년 8월 30일 "장길도 개발개방 선도구를 위한 중국의 두만강구역 합작개발 기획요강"도 국가전략으로 정식비준하였다.²⁰⁾ 북중경협의 물리적 연계성 강화와 관련해서 지린성의 창춘-옌지-투먼의 교통인프라를 축으로 개발과 대외개방을 추진하려는 '창지투 선도구 개발계획'과 라선특별시의 개발이 주목받았다.²¹⁾이라는 이와 같이 북한 핵실험에 불구하고 북중경제관계를 활성화되는 정향을 보여주었다.

〈표-1〉 중국의 대북한 수출입 동향

(단위 : US천\$, %)

연도	수출		수입		역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2004	794,525	26.5	582,193	47.2	212,332
2005	1,084,723	36.5	496,510	-14.7	588,212
2006	1,231,886	13.6	467,717	-5.8	764,168
2007	1,392,453	13.0	581,520	24.3	810,932
2008	2,033,233	46.0	754,045	29.7	1,279,188
2009	1,815,880	-10.6	808,728	7.2	1,094,715
2010	2,277,816	25.4	1,187,862	46.9	1,089,954

자료: 2004-2008년 자료는 KOTRA, 『북한경제속보』, 2009.8.7; 2009-2010년 자료는 中國海關總署, 2009/2010年 12月 進出口商品国別地区 總值表, <http://www.chinacustomsstat.com>, 2011.3.30.

- 15) 이태환, "북한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전략," 『정세와 정책』, 2006년 특집호, p. 9.
- 16) Banning Garret and Bonnie Glaser, "Looking Across the Yalu: Chinese Assessment of the North Korea," *Asian Survey*, Vol. 35, No. 6 (June, 1995), pp. 528-545.
- 17) 오경섭,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 분석: 2차 북핵위기를 중심으로," 『세종정책연구 2011-8』(2011), pp. 5-7.
- 18) 윤승현, "최근 북중경제관계의 현향과 전망," 평화재단 제38차 전문가포럼, 2010년 4월 20일, p. 20.
- 19) 배중국, "장길도 개발계획과 북중경협의 향방," 평화재단 제38차 전문가포럼, 2010년 4월 20일, pp. 21-22.
- 20) 배중국, 앞의 글, pp. 6-7. 20.
- 21) 홍익표, "북중 경제협력과 창지투 개발계획," 『북한경제리뷰』, 2010년 9월호, pp. 27-29.

중국의 대북한 수출입동향²²⁾은 2006년 1차 핵실험과 2009년 2차 핵실험 이후 단기간 동안만 감소하고 이후 다시 원상복귀하고 더 급증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중국은 책임 대국론 입장에서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제재조치에 공개적으로 동의하였지만, 실질적인 제재조치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였고, 오히려 북한체제유지와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 차원에서 북중 경제관계의 활성화를 추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은 전술적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전략적 목표를 변경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²³⁾ 왜냐하면 중국은 대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으나, 북한체제유지라는 전략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이를 행사할 동기가 적었기 때문이다.²⁴⁾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보다 북한정권의 불안정이 자국의 핵심적 국가이익을 침해할 것을 우려하였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은 북한의 군사주의를 우려하고 이에 대한 제재조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대신 원칙적으로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6자회담의 재개를 제안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 오히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방지하기 위한 한미연합군의 군사훈련에 대하여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견제 내지 위협으로 해석하고 이에 대하여 서해 인접지역에 장거리 로켓포 발사훈련, 남중국해상에서의 대규모 해상군사훈련으로 맞대응하면서 강하게 우려와 비난을 표하였다. 중국은 21세기 한미 전략동맹 추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다.²⁵⁾

중국은 냉전적 북중 동맹의 연장선상에서 중국의 지역적 국가이익을 위해서는 북한정권의 유지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최소한의 북중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여 왔다. 구체적으로 천안함 사태에 대한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에서 중국은 우호적인 한중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공격의 주제로 명기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또한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에도 연평도 포격 사건은 북한의 소행임을 알면서도 중국은 연평도 공격은 남북한 모두에 책임이 있다는 남북한 중립적 입장을 강조하면서 6자회담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냉전적 사고가 지배하는 북중 관계에서는 한반도 통일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문흥호는 한반도에서 중국의 이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영향력 유지, 분단관리와 통일대비라고 파악하고 있다.²⁶⁾ 원칙적으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핵확산 방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는 것이 중국의 확고한 입장이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동시에 중국 정부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해결할 것을 모든 당사자들에게 호소한다는 중립적인 자세를 보여 왔다.

이러한 북한 핵문제와 군사주의에 대한 중국의 반응에 대한 검토 속에서 중국은 북한체제의 유지를 최우선적 순위를 두고 한반도 긴장완화 및 평화유지, 한반도 비핵화를 후속순위로 설정하고 있다. 중국의 전략목표에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개혁·개방 등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지만,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목표는 북한정권의 유지이다. 이를 종합할 때 중국은 북한체제의 유지를 전제하고 시장 메커니즘 도입에 의한 개혁·개방으로 대외 협력적 정책으로 전환시켜 한반도의 긴장해소와 평화유지를 달성하여 남북한 개선체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중국이 선호하는 이러한 미래 시나리오에 대하여 골드 스타인은 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통한 현상개선을 의미하는 현상유지 플러스로 표현하고 있다.²⁷⁾ 리단의

22) 오승렬(2011), “북·중 경제관계의 현황과 전망,” 코리아정책연구원(2011), p. 28 재인용.

23) 위의 글, p. 35.

24) 위의 글, p. 28.

25) 이상현,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대응: 한국에 대한 안보적 함의,” 『국가전략』, 제17권 1호(2011), pp. 1-37.

26) 문흥호,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민족화해』, 2006년 3-4월, pp. 8-10.

경우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나타나는 지속성으로 현상유지와 영향력 확대로 파악하고 있다.²⁸⁾

전반적으로 볼 때 이러한 우선순위에 입각한 북중 관계는 국제적 수준에서는 표방하는 공개적 대북정책과 지역적 수준에서 운영되는 비공개적 대북정책과는 상반된 차이를 보여 왔다. 국제적 수준에서 G2라는 이름에 걸맞게 세계적 지도자급 국가로서 책임대국론에 입각하여 한반도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평화유지를 위한 북중 관계를 표방하여 왔다. 중국은 책임대국으로서 지역안보의 증진을 위하여 지역 내의 주변국들과 제도화된 안보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고 6자회담의 지역안보체제화를 시도하여 왔다.²⁹⁾

이에 대하여 스나이더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일관되지 않은 포용정책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³⁰⁾ 중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안정을 추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중국은 전반적으로 도광양회의 기초를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력 성장을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책임대국론을 강조하여 왔다.³¹⁾ 그러나 지역적 수준에서 북중 동맹에 기초하여 북한체제의 유지를 위한 북중관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전쟁에서 형성된 과거의 북중 관계가 현재에도 여전히 관철되고 있다. 북한체제의 유지가 중국의 국가이익에 중요하다는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변함없이 현재의 북중 관계에서도 계속해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북중 관계가 장기간 지속할 경우 다음과 같은 한계와 문제점을 야기 시킬 가능성이 있다.

첫째, 국제적 수준의 공개적 북중 관계와 지역적 수준의 실질적 북중 관계의 격차가 지속될수록 북한체제유지라는 지역적 이익을 단기적으로는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 지도자급 국가로서의 이미지 상실로 인한 국제적 손실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북한과의 특수성에 기초하여 불법국가로서 북한의 비정상적 활동을 옹호하고 국제적으로 합의한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방치할 경우 중국은 보편적 기치를 추구하는 세계적 지도자급 국가로서 부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북중 관계가 지속될 경우 북한체제유지로 인한 중국의 국가이익에 비하여 세계적 지도자급 국가로서의 중국 이미지의 상실로 인한 이익손실이 점차적으로 증대되는 한계를 갖고 있다.

둘째, 북한정권의 유지 차원에서 북한핵문제에 대한 제재조치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북중 관계는 북한핵이 있는 한반도 분단체제 대신 북한핵이 없는 한반도 통일을 근본적으로 모색하게 만들 가능성을 갖고 있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시험 등 북한 핵문제가 지속될 경우 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동북아의 평화유지라는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충돌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재의 북중관계는 단기적으로 북한정권의 붕괴방지라는 중국의 국가이익을 만족시켜 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한반도 안정유지, 한반도 비핵화라는 중국의 또 다른 국가이익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셋째, 북한정권의 유지 차원에서 시장메카니즘의 도입과 같은 북한의 개혁·개방에 적극적으로

27) Avery Goldstein, "Across the Yalu: China's Interests and the Korean Peninsula in a Changing World", in Alastair Iain Johnston and Robert S. Ross (eds.), 『New Directions in the Study of China's Foreign Polic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6), pp. 139-143.

28) 리단-전형권, "중국의 대 남북한정책의 지속과 동향: 후진타오 이후 남북한관계를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제13권 1호(2010), pp. 98-102.

29) 한석희, "6자회담과 중국의 딜레마," 『국제정치논총』 제45집 1호(2005), pp. 185-186.

30) 스콧 스나이더, "최근 한반도 정세진단과 해법," 『통일경제』, 제1호(2011), p. 81.

31) 이기현, "북-중관계와 한반도: 우리의 전략," 코리아정책연구원(2011), p. 70.

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중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체제유지능력의 한계점에 도달 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경제체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갖고 있는 전형적인 결핍의 경제 (economy of shortages)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³²⁾ 북한 핵문제 해소라는 기초 아래 진정성 있는 시장메카니즘에 기초한 개혁·개방이 부재할 경우 외부의 지원이 유입되더라도 북한의 체제유지능력은 점차적으로 상실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 핵문제의 해소와 시장메카니즘으로의 근본적인 개혁·개방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체제유지를 위한 지원이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북한 체제 유지능력을 상실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VI. 북중 관계의 방향과 과제: 한반도의 평화와 동아시아의 지역협력

앞으로 북중관계는 어떻게 변화하여야 하는가? 세계화, 정보화, 지역화 등의 흐름 속에서 다음과 같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북한과의 특수성이 아닌 보편적 가치에 기반을 둔 올바른 미래의 북중관계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미중관계와 관련하여 승자도 패자도 없는 공포의 균형이라는 핵시대에서 상호 긴밀한 상호의존성을 갖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앞으로 전면적인 극단적 대결구도보다 상호 영향력을 견제하면서 경쟁하는 협력관계로 모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미중관계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한 중국경제론의 입장에서 9·11 테러 이후 대테러전 관련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에 의해 중국 협력론이 부각되었다. G2 국가로서 중국을 책임 있는 이해 상관자(stakeholder)로 인정하고 협력적인 미중관계가 공식화되었다.

현 단계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은 협력을 하면서도 다양한 영역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중적, 복합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전략³³⁾과 아태 재균형(rebalancing to the Asia-Pacific) 전략³⁴⁾을 강조하면서 전통적인 우방국과의 동맹 체제를 유지·강화하는 한편, 다자주의적인 협력을 추진하여 왔다.³⁵⁾ 시진핑 체제는 신형대국관계를 내세우면서 미국과의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강대국으로서 중국의 영향력 강화를 시도하여 왔다. 시진핑은 중국이 신흥강대국으로 미국을 기존 강대국으로 규정하면서 부상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과거 역사에서 반복됐던 신흥 강대국과 기존 강대국 간의 대립과 충돌을 피하려면 평등에 기초한 상호호혜적인 새로운 대국관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면에서 미중관계는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전면적인 대결구도로 갈 가능성이 희박할 것이며 상호 영향력을 견제 수준 정도에 머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초반에 트럼프에 의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로 촉발된 미중무역전쟁으로 미중관계는 신 냉전의 초래라고 언급될 정도로 악화되어 왔다. 2018년 11월 30일 미중정상회담에서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내년 1월부터 현행 10%에서 25%로 올릴 계획을 유예하고, 미중 양국이 90일안에 새로운 무역 합의 타결을 시도하기로 합의하였다. 현재의

32) Kornai, Janos, *Economics of Shortages*, vol. 1, 2, (North-Holland Publishing Co., 1980).

33) 아태지역 내 자국의 패권유지와 영향력을 지속시키기 위해 미국은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전략과 아태 재균형(rebalancing to the Asia-Pacific) 전략을 채택하였다. 아시아 회귀전략은 미국 외교안보정책의 중심축을 아시아로 이전시킨다는 것으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에 의해 2011년에 제기되었다. 아시아 회귀 전략은 국제 정치의 미래는 아시아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34) 아시아회귀전략에 따른 재균형전략은 미국 해군력 60%를 아태지역에 집중배치를 하고 아태지역의 동맹국과 우방국과의 관계를 강화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국방현대화와 군사력 증강을 견제하기 위한 포위 및 봉쇄 전략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비하여 신형대국관계를 제시하고 적극적인 대미정책을 취하고 있다.

35) 통일교육원, 「통일문제 이해」, (서울: 늘플러스, 2014), pp. 96-98.

미중 간 무역 전쟁은 단순한 경제적 분쟁이 아니며, 단기적이기보다는 보다 중장기적인 지속 기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³⁶⁾ 그 이유로 현 미중 분쟁이 단순히 트럼프 변수라기보다는 보다 구조적인 미중 간의 전략경쟁과 결부되어 있고, 미국의 대중 전문가들을 포함한 미국 사회 전반의 분위기에 부응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한반도 질서와 관련하여 미국과 중국은 이미 한국전쟁을 통하여 한반도에서 물리력에 의한 군사적 대결은 소모적인 손실을 가져올 뿐이라는 역사적 교훈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 분단체제라는 한반도 질서 속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힘의 중심으로서 대립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한반도 통일이 동아시아지역에서 바람직한 미중관계의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한중관계와 관련하여 전략적 경제협력의 동반자로서 2000억 달러 이상의 교역규모를 추진할 정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으로 인하여 우호적인 한중관계의 유지가 더 중요한 중국의 국가이익으로 자리 잡아 갈 것이다. 그러나 냉전기 북중 관계는 우호적인 북중관계의 유지만을 고려하면 되었지만, 한중수교 이후 탈 냉전기 북중 관계는 우호적인 북중관계의 유지와 동시에 우호적인 한중관계의 유지를 고민하여야만 하는 딜레마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2016년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의 강행에 대한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d Area Defense,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재배치로 인하여 한중관계의 갈등이 발생하였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를 '군사적 협박'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면서 사드 배치 논의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국의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는 "사드 배치는 한·중 간 신뢰를 엄중히 손상시킬 것이고 그로 인한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실제 중국은 사드 배치결정 이전부터 사드 배치에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여 왔었다. 2014년 11월 16일 추귀홍 주한 중국대사는 사드 한국 배치는 한미관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발언하였다. 또한 2015년 5월 30일 한민구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사드배치는 한반도 안정을 저해한다고 언급하였다.³⁷⁾

이러한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대 입장을 시진핑 주석은 2016년 9월 6일 항저우에서 가진 한중 정상회담에서 분명히 표명하였다. 이 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는 오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제3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며 "북핵 및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조건부 사드 배치론'으로 시 주석을 설득했다. 그러나 시 주석은 "우리는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지역 안정에 해롭고 각국의 갈등을 더 높게 된다."고 대응하였다.³⁸⁾

이처럼 한중관계에서 관계악화를 가져온 사드 재배치 문제는 2017년 10월 31일 사드 배치 관련 한중간의 잠정적 합의에 따라 해소되었다. 한국 측은 중국 측의 사드 문제 관련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중국 측은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하였다. 한국 측은 중국 측의 사드 문제 관련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중국 측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

36) 김흥규, "미국의 대중 정책 변환과 새로운 냉전의 시작?" 『國際政治論叢』, 제58권 3호, 2018.

37) 김태우, "사드 배치와 한미 및 한중관계 전망", <JPI 정책포럼>, No. 2015-10, 제주평화연구원, p. 17.

38) <연합뉴스>, 2016년 9월 6일.

하였다. 동시에 중국 측은 한국 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하였으며, 한국 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하였다.

중국이 불법국가로서 북한의 비정상적 활동을 옹호하고 국제적으로 합의한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방치할 경우 중국은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세계적 지도자급 국가로서의 이미지 상실로 인한 국제적 손실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전략적 경제협력의 동반자로서 2000억 달러 이상의 교역규모를 추진할 정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으로 인하여 우호적인 한중관계의 유지가 더 중요한 중국의 국가이익으로 자리 잡아 왔다. 중국이 한국의 제1의 수출국이자 수입국으로 될 정도로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갖고 있는 점에서 한중관계가 북중 관계보다 높은 비중을 갖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인민대학의 스위홍 교수, 사회과학원의 선지룽 교수는 기존의 북중 관계에 회의적 입장을 표명하였고³⁹⁾, 소장학자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한국 전문가들은 일찍부터 북중 관계보다 한중관계가 중국의 국가이익에 중요하다고 강조하여 왔었다.

셋째,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관련하여 올바른 북중 관계로의 전환은 궁극적으로 동북아 및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환은 북한 핵문제의 해소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시장경제 메카니즘의 도입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추진함에 따라 남북관계의 개선이 진전되어 한반도 통일을 수립될 경우 한반도의 긴장해소 및 평화유지로 인하여 동아시아의 안정과 협력을 증진시킬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중간 한일 간 FTA 체결에 대한 논의와 협상이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현 단계에서 한반도 통일은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정치적·경제적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동북아 공동체의 토대가 구축됨에 따라 큰 진전을 맞이하게 될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V. 결론

이 연구는 왜 한반도 통일이 안 되고 있는가를 한반도 통일의 국제적 조건 중에서 북중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한국전쟁과 연관되어 형성된 과거의 북중 관계는 다음과 같은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첫째, 중국과 대결적인 성격을 갖는 한반도 통일에 반대한다, 둘째, 북한체제의 유지가 중국의 국가이익에 중요하다, 셋째, 남북한체제 속에서 힘의 중심인 미중의 소모적인 군사적 대결은 차선으로서 남북한 분단체제의 수용이 가능한 차선이다.

둘째, 지역적 수준에서 북중 동맹에 기초하여 북한체제의 유지를 위한 북중 관계를 운영할 경우 다음과 같은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첫째, 북한체제유지로 인한 중국의 국가이익에 비하여 세계적 지도자급 국가로서의 중국 이미지의 상실로 인한 이익손실이 점차적으로 증대되는 한계를 갖고 있다. 둘째, 현재의 북중 관계는 단기적으로 북한정권의 붕괴방지라는 중국의 국가이익을 만족시켜 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한반도 안정유지, 한반도 비핵화라는 중국의 또 다른 국가이익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셋째, 북한 핵문제의 해소와 시장 메카니즘으로의 근본적인 개혁·개방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체제유지를 위한 지원이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북한체제 유지능력을 상실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셋째, 세계화, 정보화, 지역화 등의 흐름 속에서 미래의 북중 관계는 다음과 같은 한반도를

39) 서진영, 『21세기 중국의 외교정책』, (서울: 폴리테이아, 2006). pp. 358-359.

비롯한 동아시아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북한과의 특수성이 아닌 보편적 가치에 기반을 둔 올바른 미래의 북중 관계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미중관계와 관련하여 승자도 패자도 없는 공포의 균형이라는 핵시대에서 상호 긴밀한 상호의존성을 갖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앞으로 극단적인 전면적 대결구도보다 상호 영향력을 견제하면서 경쟁하는 협력관계로 모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한중관계와 관련하여 전략적 경제협력의 동반자로서 경제적 상호의존성으로 인하여 우호적인 한중관계의 유지가 더 중요한 중국의 국가이익으로 자리잡아 갈 것이다. 셋째,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관련하여 올바른 북중 관계로의 전환은 북한 핵문제의 해소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시장경제 메카니즘의 도입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추진함에 따라 남북관계의 개선이 진전되어 한반도 통일을 수립될 경우 한반도의 긴장해소 및 평화유지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동북아 및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한반도 환경변화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기존의 북중관계는 점차적으로 중국의 이해관계에 반한다는 논리로 정상적인 북중 관계를 새롭게 변모시키는 노력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할 통일한국은 궁극적으로 중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할 것이라는 한반도 통일비전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수석(2011), “북한·중국 동맹 50년: 평가와 전망,” 코리아정책연구원(2011).
- 김동수(2015), “미중관계의 변화와 신동북아 형성,” 『CHINA 연구』, 제18집.
- 김흥규(2018), “미국의 대중 정책 변환과 새로운 냉전의 시작?” 『國際政治論叢』, 제58권 3호.
- 리단·전형권(2010), “중국의 대 남북한정책의 지속과 동학: 후진타오 이후 남북한관계를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제13권 1호.
- 문흥호(2006),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민족화해』, 2006년 3-4월.
- 박종철 외(2011), 『통일환경평가: 국내요인, 남북한 상대적 역량요인, 북한요인, 국제요인의 종합평가』, 서울: 늘품플러스.
- 배중국(2010), “장길도 개발계획과 북중경협의 향방,” 평화재단 제38차 전문가포럼, 2010년 4월 20일.
- 서진영(2006), 『21세기 중국의 외교정책』, 서울: 폴리테이아.
- 스콧 스나이더(2011), “최근 한반도 정세진단과 해법,” 『통일경제』, 제1호.
- 오경섭(2011),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 분석: 2차 북핵위기를 중심으로,” 『세종정책연구 2011-8』.
- 오승렬(2011), “북·중 경제관계의 현황과 전망,” 코리아정책연구원(2011).
- 윤덕민,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대중전략,” 『전략연구』, 2013. 7.
- 윤승현(2010), “최근 북중경제관계의 현황과 전망”, 평화재단 제38차 전문가포럼, 2010년 4월 20일.
- 이기현(2011), “북·중관계와 한반도: 우리의 전략,” 코리아정책연구원(2011).
- 이상숙(2008), “데탕트 시기 북중관계의 비대칭갈등과 그 영향,”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제3호.
- 이상현(2011),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대응: 한국에 대한 안보적 함의,” 『국가전략』, 제17권 1

호.

이태환(2006), “북한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전략,” 『정세와 정책』, 2006년 특집호.

이태환, “오바마-시진핑의 미중 정상회담과 한반도,” 『정세와 정책』, 7월호(2013).

최명해(1998), “북·중 동맹조약 체결에 대한 소고,”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제4호.

최명해(2009), “북한의 2차 핵실험과 북·중관계,” 『국방정책연구』 제25권 제3호, 가을.

코리아정책연구원(2011), 『북중관계의 진실과 허상』, 코리아정책연구원 외 공동학술회의, 2011년 4월 12일.

한석희(2005), “6자회담과 중국의 딜레마,” 『국제정치논총』 제45집 1호.

홍익표(2010), “북중 경제협력과 창지투 개발계획,” 『북한경제리뷰』, 9월호.

Avery Goldstein, "Across the Yalu: China's Interests and the Korean Peninsula in a Changing World", in Alastair Iain Johnston and Robert S. Ross (eds.), 『New Directions in the Study of China's Foreign Polic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6).

Banning Garret and Bonnie Glaser, "Looking Across the Yalu: Chinese Assessment of the North Korea," Asian Survey, Vol. 35, No. 6 (June, 1995).

Carl von Clausewitz, On War, edited and translated by Michael Howard and Peter Paret with Introductory Essays by Peter Paret, Michael Howard, and Bernard Brodie and a Commentary by Bernard Brodie,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Harry G. Summers, JR., On strategy: The Vietnam War in Context, (Strategic Studies Institute US Army War College, Carlisle Barracks, Pennsylvania 17013, April, 1981).

Kornai, Janos, Economics of Shortages, vol. 1, 2, (North-Holland Publishing Co., 1980)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s Republic of China, Annual Report to Congress (2010)

SIPRI, SIPRI Yearbook of 2011: Armaments,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IMF World Economics Outlook, October 2014,

<http://knoema.com/nwnfkne/world-gdp-ranking-2014-data-and-charts>(검색일 2015.2.9.).